

114 모두의 AI

AI for All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

-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공공·민간 전반에서 AI 활용 기회를 넓히려는 사회·정책 담론
- 개방형 공공 서비스, 교육 지원, 접근성 기반 강화 등이 함께 논의

모두의 AI란?

'모두의 AI'는 AI 활용 기회가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자는 정책적 방향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용어라기보다, AI 접근성·디지털 격차 해소·공공 AI 서비스 확대 같은 과제를 둘어 표현하는 국가 AI 정책의 주요 아젠다입니다. AI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취약계층과 고령층 대상의 AI 교육 강화, 공공 분야의 개방형 AI 도구 제공 등이 주요 논의로 이어집니다. 이 표현은 2025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출마 당시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시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두의 AI'는 AI 확산 과정에서의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는 정책적 슬로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두의 AI를 위한 정책 방향

'모두의 AI'는 △AI 서비스의 무료 또는 저비용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고령층을 포함한 국민 대상 AI 활용 교육 △학생을 위한 기초 AI 학습 기회 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도입 비용 완화 △지역 간 디지털 접근성 차이 감소와 같은 구체적 정책 과제들과 함께 논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AI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 AI 활용 능력의 격차와 기술 환경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 기반 모델·데이터·도구를 개방형으로 제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도 포함됩니다.

모두의 AI의 구현

'모두의 AI'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기술적 기반, 제도적 장치, 교육 체계, 예산과 협력 구조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저사양 기기에서도 작동하는 경량화 모델, 직관적 인터페이스, 장애인·고령층을 고려한 접근성 기능 등 보편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기준, 알고리즘 검증 체계,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국민 전반의 AI 이해도를 높이는 AI 리터러시 교육 인프라가 학교·직업훈련·지역사회에 고르게 구축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은 기본 인프라와 교육·접근성 보장을 담당하고, 민간은 기술 혁신과 서비스 확장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모두의 AI'는 국민 생활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기술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